먼저 손 내민 辯〈변〉, 위상 달라진 警〈경〉

광주변호사회 업무 협조 사항 담긴 서면 전달하며 전남경찰청과 간담회
경제사건 전문 수사 인력 확충·피조사자 권리 보장 등 5가지 사항 주문
수사·기소 분리법안 시행 앞두고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 요청

광주변호사업계가 달라진 '경찰 위상'을 실감하면서 경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관행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500여 변호사 회원을 거느린 광주변호사회가 평소 교류가 뜸하던 전남경찰청과의 간담회에서 이른바 광주변호사회 5대 업무요청 사항이 담긴 서면을 경찰에 전달하며 경찰의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변호사업계는 검경수사권 조정(2021년 1월)과 올 9월 수사·기소분리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달라진 위상을 절감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사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남경찰청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6일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과 진용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주제는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으로 경찰은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직접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변호사회 사무실을 찾았다고 한다.

간담회 개최 역시 경찰이 이달 초 광주변호사회 측에 먼저 제안했고, 진 회장과 장정희 제1부회장 등 변호사회 집행부는 사전에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 회장 등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경찰 수사 종결 시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관련 내용을 통지해주고, 경찰 관서에 변호인 입회가 가능한 조사실 확충을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불송치 결정했는데도 변호인이 이를 알지 못해 "당황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약 30~40평 크기로 실내가 탁트인 경찰서 형사과에서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너무 시끄러워 집중이 힘들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광주변호사회는 사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담아 작성한 '전남경찰청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이라는 A4 용지 4쪽짜리 서한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서한에서 광주변호사회는 ▲경제사건 관련 전문 수사 인력 확충 ▲수사 상황 및 종결 사항 변호인 통지 ▲수사 과정에서 결과 예단 발언 자제 ▲불송치 결정문 구체적 이유 적시 ▲영장 사본 교부 등 피조사자들의 적법한 권리 행사에 대한 경찰 교육 강화 등 크게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광주변호사회는 변호인 또는 법률 대리인과의 조율 없이 피의자·고소인 조사 일정을 확정해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수사 일정을 조정하는 일이 적지 않고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등에 배정된 국선변호사에게 수사 결과가 통지되지 않아 피해자와 국선변호사 사이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수사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피의자가 제대로 된 자기방어를 하지 못하게 돼 궁극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 불송치 결정서'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같다며,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고 변호사들이 이의 신청 사유를 특정할 수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불송치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들이 영장 사본 교부를 요청하거나 조사 당일 관련 서류 등 사(복사)를 요청할 경우 관계 법령상 거부할 근거가 없는데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전남경찰청에서 대응 매뉴얼을 작성, 배부하는 등 일선 수사기관에 안내와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진용태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형사법 제도 변화로 인해 경찰의 위상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말 그대로 막강해지고 있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피조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의 수사 관행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전남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도 경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도록 일부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최근 광주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자청하고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결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모심는 계절 30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의 논에서 농민들이 이앙기를 이용해 모를 심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밀폐 작업장 질식사고 치명적…2명 중 1명 사망

10년간 사고 348명 중 165명 숨져…오폐수·정화조 작업 가장 위험

밀폐된 작업장 등에서 최근 10년간 일어난 질식사고로 348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질식사고 19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재해자 중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치명률은 질식사고가 47.4%로, 전체 사고성 재해 평균(1.1%)의 4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흔히 치명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지는 감전과 추락사고의 치명률은 각각 6.4%, 2.5%에 그친다.

순천 소재 한 폐유 정제공장에서는 2017년 12월 4일 일어난 질식사고로 작업자 3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은 크게 다쳤다. 에스테르폴리올 반응기 내부 잔여물 확인을 위해 내부 사다리를 통해 내려가던 중 작업자 1명이 산소 결핍으로 질식하면서 추락 후 숨졌다. 구조에 나선 동료 작업자도 부상당하는 등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노동부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를 사고 빈도,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한 결과 오·폐수,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작업(이상 총 49명 사망)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외에는 불활성가스 취급 설비 작업(23명 사망), 갈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14명 사망),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탱크 용접 작업(13명 사망), 각종 관거·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15명 사망) 등도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별로는 봄에 발생한 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름(49건), 겨울(44건), 가을(40건)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날씨가 더울수록 맨홀 등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며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 공간에서는 작업 전 반드시 산소 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짝퉁 롤렉스 속여 판 20대 구속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가짜 명품 시계를 진품처럼 속여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나주경찰은 롤렉스 시계 모조품을 고가의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2000만원 상당의 진품 롤렉스 시계를 650만원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흥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선뜻 믿으려 하지 않자 "시계가 위조품일 경우 가격의 2배를 보상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모조품 시계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짜 명품시계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7개월 동안 수사를 벌이다 최근 A씨의 인터넷 활동명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순천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외국인 여성 차에 감금 300여km 질주 3명 검거

나주경찰은 외국인 여성을 차에 감금하고 300여km를 질주한 40대 A씨 등 3명을 감금 및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9일 오전 7시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태국 출신 여성 B(30)씨에게 채무금 250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차에 강제로 태운 뒤 300여km 떨어진 나주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 용의자들은 서로 지인 관계로, 이들 중 한 명의 거주지를 들르기 위해 나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변제를 요구했으며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경찰은 인천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뒤,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나주 산포면 일대에서 A씨 등이 탄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B씨에게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준 게 아닌지 여부를 포함해 탑승 당시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황주홍 전 의원 가석방 출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복역한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30일 가석방됐다.

황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이날 오전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장흥·강진 등에서 마중 나온 지인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염려해주고, 함께해주고, 성원해주고,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현역 후보로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황 전 의원은 비서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회사 사정상, 22억, 신안동 대지, 매매

- **광주 북구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지하1층 지상10층, 72호실)
- **근린상가 등 타업종 변경가**
- 현, 주차장 영업 中

(주)미르. 010-8902-7900